

# 정기 국회에 바란다

— 축산인의 고통을 분담해 주기를 —



김 찬 채  
(본회 이사)

문민 정부에 대한 축산인의 기대는 누구보다도 크다. 새 대통령이 농민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역설하신데 대해 매우 공감이 간다.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 정부도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양돈인이 치러야 할 국제경쟁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94년이면 축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육류는 물론 외국 축산 기술과 자본까지도 마구 유입되게 된다는 긴박한 처지이다.

사태가 이처럼 긴박하기에 우선 분담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본다.

## 고통의 분담(삼위일체)

1. 축산인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2. 국회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법적 개선.
3.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행정 및 세계상의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농업 환경의 조성.

이상 3가지는 3자 공동책임의식으로 한데 뭉쳐 힘을 모아야만 해결된다. 그러면 국제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고수되어야 할 점을 열거하면

## “국회에서 개선할 사항”

1.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2. 자조금제도의 입법화.
3. 배합사료 원료 수입 자율화 및 관세의 면제.

## “현 규제가 지켜져야 할 사항”

— 사육 상한선의 고수

이상 제시한 문제를 삼위일체가 되어 고통을 구체적으로 분담하자.

### 1. 축산인이 해야 할 일

우리 축산인은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이 해 주기만을 바라지는 않는다.

3D현상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축산업을 위해 밤을 지새우기 일쑤이고, 매일 연속되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국민 체력 향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나간 3공때부터 정부의 중공업 중점 시책에 밀려 오늘날엔 온 국민중에서 가장 못 사는 계층으로 전락되어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인은 아직도 농촌을 지키면서 국제경쟁에 대응하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능력돈을 확보, 시설의 개선,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막대한 자금 소요 등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유 업종이요, 생업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 이 고통을 이해하고, 분담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서이다.

### 2.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축산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법적 개선이다.

첫째: 축산 배합사료 및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다.

우리의 경쟁국에서는 축산에 세금은 물론 없고 오히려 수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는 10%의 부가세를 부담케함은 손발을 묶어 놓고 적 전차와 싸우라는 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축산인의 손발을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부가세와 관세를 조세 감면, 특별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둘째: 자조금제도의 입법화이다.

자조금은 축산업체가 단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수익자가 자진 참여하여 조달되는 재원으로서 경쟁국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굳이 이를 막아 생산자단체 활동을 제한할 까닭이 없다. 생산자단체의 자율화를 위해 장려차원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

셋째: 배합사료 원료 수입의 자율화 및 관세의 면제이다.

축산은 자기 농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사료를 선택한다는 것이 생산비 절감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원료를 구입할 길이 막혀 있다.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할 경우 생산원가 15%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맞지 않는 남의 신발을 내 발에 맞추는 격으로 남이 만든 사료를 비싼 값에 구입하므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가 없다.

넷째: 축산자금보조의 확대 및 장기저리 금융 지원이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축산인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힘에 벅차다.

국가의 환경보존 차원에서 경쟁국처럼 80%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융자금은 15~20년 장기저리(년1%)로 지원토록 조세감면 특별조치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돼지사육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

(1)'89년 2월 18일 비농민 대자본의 양돈업을 규제하는 돼지 사육두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축

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천도 해보지도 못한 시점에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통치권자의 의견을 내세워 사육 상한선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중소전업농민의 생존권을 대재벌 또는 외국 자본에 넘겨버리겠다는 말이 된다.

(2)외국자본 유입 개방 의미.

특히 '97년 개방의 물결로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연약한 중소 축산업은 무너질 형편인 바, 오히려 없는 법을 입법화하여 외국 자본을 막아야 할 시점인데, 있는 법을 없앤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지?

(3)시장가격 혼란 초래

다두 사육자는 독과점 기업으로, 시장경쟁 질서를 혼란케 한다. '89년 상한선 설정 이전에 다두 사육자의 독점횡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다.

(4)재벌들의 토초세 은폐수단을 제공한다.

많은 땅을 가진 재벌들의 토초세 대상의 은폐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은 더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돼지사육 상한선은 폐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정부에서는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행정 및 세제상의 제반 문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중공업정책에 희생된 1차산업의 회복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축산인도 허리 한 번 펴고 살 수 있는 시책을 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수입 개방을 앞두고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어찌 이것 뿐이요마는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 축산인과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슬기를 모을 때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축산업이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